

동북아 안보구조와 평화공동체 구축의 가능성

The East Asian Security Structure and Building the Peace Community

김 준 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격랑속의 한반도 및 동북아

세계역사에 있어 지정학적 저주라고 불리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발칸반도, 다른 하나는 한반도이다. 반도 국가는 과거 로마처럼 강성할 때는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지만, 약할 때는 대륙과 해양의 강국들 사이에 끼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양쪽 중 하나라도 팽창전략을 택할 경우에는 반도가 가장 먼저 침략의 대상이 된다. 그야말로 동네북, 또는 현관에 깔린 매트(doormat)가 되는 것이다. 『강대국의 비극』의 저자인 미어샤이며도 폴란드와 함께 한국을 세계 지정학위치 가운데 최악인 국가라고 말했다.¹⁾ 미국의 외교전문지 『폴린 폴리시(Foreign Policy)』 2013년 1월호의 특집기사는 “발칸화하고 있는 동아시아”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²⁾ 브레진스키 역시 거의 2012년 저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에서 세력변동에 따른 지정학적 취약국가로 파키스탄, 대만과 함께 한국을 꼽았다.³⁾

1) 『강대국의 비극』의 저자인 시카고대학의 Mearsheimer는 폴란드와 함께 한국을 세계 지정학위치 가운데 최악이라고 말했고, Foreign Policy 잡지는 아시아의 발칸화를 말하기도 한다. “국제정치 대가 미어샤이며 교수에게 ‘한국 미래’ 묻다,” 『중앙일보』, 2011. 10. 10; Kevin Rudd, “A Maritime Balkans of the 21st Century?” *Foreign Policy*, January 30, 2013.

2) Kevin Rudd, “A Maritime Balkans of the 21st Century?” *Foreign Policy*, January 30, 2013.

3) Zbigniew Brzezinski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3).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정치 및 안보분야의 협력수준은 매우 낮을뿐더러 영토분쟁, 군비경쟁, 역사왜곡논쟁, 핵무기개발 등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아시아패러독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세력재편과 이에 따른 한·미·중·일 4국의 치열한 국익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외교는 현실적인 대안보다 공허한 외교수사나 제안 또는 구상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제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패러독스를 내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당면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인식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중 패러독스

한반도와 그 주변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분단구조는 그대로이고, 탈냉전 도래 사반세기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진영대결구도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일본의 침체, 그리고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겹쳐지면서 불안정성이 점점 증대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아시아패러독스만 강조했다지만 한반도 주변은 최소한 3중의 패러독스 상황이 중첩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것이 보다 본질에 가까운 그림일 것이다.

3중 패러독스 상황에서 가장 거시적 차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호의존 증대와 갈등심화의 역설현상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2014년 통계로 5천9백억 불을 넘었으며, 중국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최대 교역국이며, 미국 역시 EU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최대 교역국이다. 미국은 중국 상품의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은 미국 상품 수출의 제3대 수입국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 국채 1조2천5백억 달러를 보유한 최대 채권국이며 이는 중국 외환보유고의 36%를 차지한다. 미국 소비자는 값싼 중국 상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세계질서 안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반면에 상호 군사적 불신 역시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을 자신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사일방어체제의 궁극적 목표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중국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군사비를 꾸준히 증강해

왔고, 핵잠수함, 스텔스기, 항공모함, 대항모미사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등의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행보로 판단한다. 엘리슨이 제기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21세기 미중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⁴⁾ 미중 양국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불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상호신뢰가 충분하지 않고, 국제정치를 특징짓는 권력외교의 속성상 갈등을 피하기 쉽지 않다.⁵⁾

패러독스의 두 번째 층위는 아시아패러독스다. 전 세계가 동아시아를 경제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돌리고 있음에도, 정작 중심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의 갈등과 대립은 확대일로에 있는 역설이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붕괴되면서 미소대결구조가 사라지고,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국가라는 공동정체성이 확대되는 조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협력이나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모색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와 더불어 미국의 침체와 중국의 부상이 겹쳐지면서 지역공동체 구축의 논의는 약화되고 세력재편에 따른 갈등이 부상했다. 이런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은 중일간의 역내 소(小)패권경쟁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국력의 침체문제에 직면해있는데, 중국의 부상이 주는 위협은 일본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중일사이에는 역사논란과 영토분쟁으로 정치지도자들의 대화는 단절되고, 양국의 국민감정은 악화된 채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아베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미일동맹에 의한 대중 세력균형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패러독스는 한반도의 남북한에서 작동한다. 분단구조의 지속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로 말미암은 안보위협으로 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탈냉전의 기회를 바탕으로 초기에는

4) 엘리슨은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전쟁의 원인이 급부상한 아테네와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존 패권 스파르타의 충돌인데, 세력전이의 불안한 과정에서의 현상타파가 역사를 따라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1500년 이후 세력전이 현상이 16번 있었는데, 그 중 12번이 전쟁으로 치달았다. Graham Allison,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September 24, 2015.

5) 공격적 신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이나 중국의 정책적 선택에 관계없이 중국의 존재와 부상자체가 안보딜레마를 초래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2001).

반세기 분단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무산된 상태다. 분단구조를 해소하기는커녕 심화시키고 상호적대감은 증폭되었다.

동북아 안보구조와 한국의 선택

3중 패러독스는 한국의 미래를 규정할 핵심변수로 작동한다. 한국은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미국을 최대 안보 파트너로 맺고 있기 때문에 미중갈등이 격화될수록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북관계의 악화가 동북아 전체의 패러독스를 강화시키는 뿔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호전적인 도발의 책임이 크지만,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도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고, 이를 군사동맹 강화나 진영외교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아시아전략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 모아지면서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이 강화된다. 하지만 이는 다시 북·중·러의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 중미의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을 감안하면 과거 냉전체제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미중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시험대로 삼아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은 미중전략의 ‘테스트베드(test bed)’가 되는 셈이다. 이미 방공식별구역, 사드배치, 집단자위권 허용, 그리고 최근의 남중국해에 대한 한국역할론 등이 바로 그런 함의를 가지며, 앞으로도 유사사례들이 반복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⁶⁾ 현재 세력전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대중봉쇄를 위해 미일동맹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면서 한국의 배타적 진영선택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결과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언행이 이례적으로 거칠어지고 있다.⁷⁾

6) 2015년 9월 박근혜와 오바마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남중국해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Kang Seung-woo, “South China Sea dispute overshadowing summits: Seoul under pressure to take stanc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The Korea Times*, October 29, 2015.

7) 집단자위권의 해석, K-FX 사업, 그리고 남중국해에 대한 대한민국 압박이 대표적인 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지금까지 일종의 유사삼각동맹으로써 대미관계와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따라 때로는 보완재 때로는 대체재 관계였다. 물론 미국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양국이 보완재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미, 미일, 그리고 한일 관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동맹의 선호도가 실제로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선호도를

더욱이 최근의 국제정치에서 대외정책이 국내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 유관국 6개국은 내부단결과 권력공고화를 위해 강경하고 민족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갈등구조에 편승하려는 유혹이 커지면서 역내국 사이의 신뢰구축이 어려워진다.⁸⁾ 북한의 선군정치, 일본의 우경화 드라이브, 러시아의 반미정책, 중국의 신민족주의, 미국의 중국위협론, 한국의 안보포퐁리즘 등도 모두 유사한 맥락이다.⁹⁾ 그 중심에 남북관계의 악화가 놓여있다. 단순히 분단을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심화시키고 상호적대감은 더 커졌다.¹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동맹에 있어 군사적 요소가 지배하고 있으며 남북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이 초래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도발과 호전적 행동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한미양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고, 이를 동맹 강화나 진영외교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¹¹⁾

구조 및 지정학적 변수를 함께 내포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하락에 따른 복잡하고 불안정한 동북아의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는 또다시 국내정치적으로는 기득권의 인질이,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는 패권경쟁의 인질이 될 위험에 처해있다. 조건과 양상이 매우 다르기에 역사의 반복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구한말 강대국의 세력재편에서 이미 크게 희생당했던 경험을 반복할 수 없다는 명제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미중대결구조가 굳어져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성하는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해야할 시점이다.

동맹국을 길들이는 카드로 사용했다.

- 8) Charles A. Kupchan, "From Enmity to Amity: Trust's Part in US Foreign Policy," *Global Asia*, Vol. 8, No.3, Fall 2013, p. 31.
- 9) Joon Hyung Kim, "Letting Off Steam: South Korea's Role in Northeast Asia," *Global Asia*, Vol. 8, No. 1, Spring 2013. pp. 25-26.
- 10) 장달중, 이정철, 임수호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대립』(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p. 41.
- 11) 커밍스는 남북한을 두고 "여전히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형제(fighting brothers)"라고 표현한다. Bruce Cumings, *The Korean War: A History*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11).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정부의 외교는 무기력하지만 아직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중이 대결시나리오를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한국 역시 편을 가르고 진영을 확고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일본은 중국을 이미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세력균형전략에 나섰다. 한국의 전략은 아직 중국의 협력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과 경제교류의 혜택을 공유하는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에 가깝다. 한일관계 악화로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대중봉쇄망 구축이 지연되는 것이나, 중국이 한국의 완충역할에 일정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작지만 운신의 폭이 되고 있다.

결국 열쇠는 남북관계 복원이다. 우선 정부의 신뢰외교가 북한 길들이기 차원의 원칙론을 넘어 과정을 중시하는 신뢰구축외교로 가야 한다. 2015년 8월 휴전선 묵함 지뢰 폭발로 다시 촉발되었던 남북한 대결상황은 남북고위급의 마라톤협상 끝에 8월25일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정부가 중국의 전승절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일하게 참여함으로써 강화되어오던 진영대결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할 수도 있었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런 흐름을 한국이 활용해서 협력적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국내정치일정과 함께 여러 면에서 남북문제나 6자회담의 재개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다. 현재 한국만이 주도권 행사가 가능하다.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북한을 압박하기위한 북한붕괴 및 흡수통일론의 재연이거나, 또는 국내용 정치담론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현 의지와 방법들을 장착한 정책담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냉혹한 현실에서 평화담론이 비현실적 이상주의라는 비판을 끊임 없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조셉 나이의 말처럼 평화는 우리들이 숨 쉬는 공기와도 같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없어지면 모두가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힘써서 얻고 또 지켜야 할 가치다. 지난 수년간 안보담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현상과 함께 평화에 대한 열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경한 대외정책과 안보담론이 각 정부당국자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신냉전적 동맹 및 진영체제의 부활을 약화 또는 저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자화인데, 동북아의 안보구조나 현재 상황이나 모두 여의치 않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구상을 포함해서 현재 다자체제에 대한 제안들은 많지만 대부분 외교적 담론으로 그치고 있으며 실효성이 크지 않다. 한반도 진영대결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체제여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로선 1.5트랙이나 트랙 II를 먼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미국과 북한의 참여가 관건인 것은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에서 트랙 2인 동북아 시민사회의 연대 역시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서해의 합의와 충청남도의 역할

동북아의 진영구도를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분야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해이다. 최근 남중국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의 기싸움은 서해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이 지난 2년간 스프래틀리 군도 중 7개의 암초를 연결해서 인공섬을 만들면서 중국의 주권지역임을 강조하고 나서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갈등국면에 돌입했다. 단순한 신경전과 언술공방을 넘어 미국은 인공섬 근해로 군함을 파견했고, 중국은 곧바로 대응하는 등 군사충돌의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¹²⁾ 아시아의 바다를 놓고 벌인 미중의 기싸움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에 미국이 항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을 놓고 일련의 공방을 벌였었다. 이는 센카쿠(다오위다오)의 동중국해와 스프래틀리의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처럼 서해 역시 언제든지 미중간의 갈등의 바다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서해가 자기의 앞바다

12) 미국은 구축함과 항공모함에 이어 전략 폭격기까지 남중국해에 파견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남중국해 지역을 관할하는 남해함대 항공병 부대 소속 쟈-11B 전투기를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용싱다오에 배치하며 실전 훈련을 벌였다. 일부 중국군 장성들은 인공섬에 군대를 주둔시켜 미국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고 있다.

게다가 서해는 1999년 연평해전부터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까지 남북한의 군사충돌이 5차례나 반복되었던 곳이다.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10.4선언으로 공동어로구역에 합의하면서 잠시 ‘평화의 바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후 남북관계악화와 더불어 남한의 국내정치에 매몰되면서 무위로 끝나버렸다. 이 지역은 또한 북·중간에도 미묘한 갈등의 지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북한이 중국 어선을 향해 발포한 적도 있고, 나포해 간 적도 있다. 이렇게 남-북-미-중의 갈등의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서해를 하루빨리 다시 평화의 바다로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아시아평화공동체 구축까지 가능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내정치역학과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공동어로구역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4개국 공동으로 ‘해양 비무장 시대(Maritime DMZ)’를 선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양보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양보가 더 중요하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획정된 북방한계선(NLL)은 현재의 동아시아 안보구도에서 대중견제를 위한 요긴한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차례 남북이 합의한 경험도 있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보다 미국의 입김이 아직은 가장 덜 미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설득하기에 따라 불뚱이 번지기 전에 불씨를 차단하는 장치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기서 충청남도의 틈새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6자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충청남도가 1.5 트랙의 다자포럼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환황해포럼(The Pan-Yellow Forum)’이 일종의 기함(flagship)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진영대결과 전쟁의 바다가 될 수도 있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국들의 중앙 및 지방정부 관료들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6자회담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외교 및 국방 분야의 정부 관료와

학계인사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해온 동북아안보협력대화(NEACD)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¹³⁾

충남도의 구상이 공허한 외교수사나 수많은 제안 중의 하나에 머물지 않아야 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레토릭이나 이상주의적 외교담론보다는 현실을 보다 냉정하고 심각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면 애초부터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참여국들의 실천의지와 자발적 헌신이 매우 중요한데 이기적 국익추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이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무수하게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현실주의적 냉소주의에 빠져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수용할 수 없다. 지금도 적지 않은 정상간 회담이나 국제회의,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구상과 제안들만 늘어날 뿐, 실제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당면한 딜레마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인식과 분석을 전제하면서도 비전을 향한 실천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복적인 분쟁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현 구도상 확산가능성을 품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1.5 트랙의 협의체를 만들어 협력방안들을 논의하고, 이를 관련국 정부들의 공식적인 합의로 발전시킨 이후, 다시 이를 발판으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나가는 3단계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13) NEACD 홈페이지 참조(<http://www.4au-pair.com/tag/neacd> 검색일 2015년 10월 2일)